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7월은 4.16 특별법 제정 골든타임”

✎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4.07.02 13:28

민주노총 “세월호 이전과 이후 같기 원치 않아 7.22 동맹파업 나선다”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2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7월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 제정이 어려우니 국민이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회견 여는 말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0일 가까이 됐고 7월 24일이면 100일인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무엇 하나 못하고 있으며 아직 11명의 실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고 기관보고를 받는다지만 즐기고 있고 놀고 있고 속된 말로 자빠져 있다”면서 “정권의 책임, 규제완화를 비롯한 구조적 책임에는 눈감고 있으니 재발방지도 안전한 사회 건설도 아직 먼 길”이라고 규탄했다.

박 대표는 “특별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한데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말하고 “참사 100일이 되는 7월24일까지 1단계를 매듭지어야 하며 그 핵심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면서 “정부가 안한다면 국민과 함께 국민적 여론으로 기필코 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이완영 의원이 조는 모습이 공개된 후 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모니터링을 하던 로스쿨 학생들이 국회 출입이 봉쇄됐다”고 말하고 “세월호 특별법에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엄중히 묻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 사태는 수사로 풀릴 수 없는 없는 문제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는 세월호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이익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가 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과 공공안전이 노동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의지를 모아 건설노동자, 철도·지하철노동자, 보건의료노동자, 조종사, 화물노동자들이 시민안전 공공안전을 결의한 바 있다”고 전하고 “오는 7월 5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세월호 방문단을 조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사상 유례 없이 전 조합원 서명과 그 가족들 서명을 조직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결코 세월호 이전의 세상을 원치 않으며 7월 22일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동맹파업을 조직하고 투쟁한다”고 천명했다.

신 위원장은 “민중의 희망, 국민의 희망을 만들지 못하면 또다시 참사가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투쟁으로 세월호 특별법과 천만서명을 완수할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염원을 모아 구호를 외쳤다.

“참사를 멈추자!”

“안전사회 이룩하자!”

“책임자를 처벌하자!”

“실종자를 구조하자!”

“천만서명 완수하자!”

“특별법을 제정하자!”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이 국민대책회의 7월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30일 재보선 전까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다양한 행동, 세월호 가족들의 공동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7월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대책회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서명운동 세월호 가족버스를 7월2~12일까지 전국 순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특별법 안을 마련하고, 7월5일 촛불(안산)·12일 촛불(서울)을 진행한다. 또 7월 19일 세월호 버스 수백대를 서울에 집결시켜 전국집중대회를 개최한다.



▲ 회견 참석 대표자 발언하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100일 100시간 행동(7월21~24일)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투쟁 보고대회, 위험사회를 멈추는 국민행동, 전국 각지에서 팽목항으로 기다림의 버스, 세월호 참사 100일 행동을 펼친다.

조희주 용산참사대책위 공동대표와 정형권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 제하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7월 2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세월호 가족버스가 더욱 많은 시민과 노동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역의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또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416 행동을 조직하고, 7월 19일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집중 범국민행동을 조직하는 한편, 참사 100일이 되는 7월 24일까지 100시간 행동을 조직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국가는 달라야 한다"고 선언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틀을 닦을 4.16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다.